

혈세 줄줄 새는 우편원격 직업교육

직장인 5647명 허위 교육·대리 시험...5억 쟁건 2명 입건 광주경찰, 교육기관-사업주간 부당거래 여부 등 수사 확대

평생교육시설 대표 A씨(51)는 지난 2015년 광주시 북구에 우편원격 훈련 기관을 개소했다. 우편원격교육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들이 우편으로 공부할 서적을 받아 인터넷으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다.

하지만, A씨 등은 근로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할 3만원 상당의 교육 서적 2권을 보내는 대신 근로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1만5000원 안팎의 일반 도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책값을 가로챘다. A씨는 또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으로 보내 대신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이른바 사후 관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A씨는 근로자 1인당 6만~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된 교육비

를 모두 챙겼다.

김현길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매년 1조 5000억원(2016년 기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로, 타 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교육기관과 사업주간의 계약과정에서 부당거래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등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연간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만 1조원대를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직업훈련을 하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평생교육시설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씨를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우편원격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직장인 5647명 뒤편으로 1006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등록한 150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회사 직원 대신 온라인 시험 등도 보게 했다.

A씨 등이 훈련비를 가로챈 우편원격 훈련교육 사업은 교육기관이 사업장 대신 훈련비를 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A씨 등은 직업훈련을 등록한 직장인 중 상당수가 귀찮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 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대리출석과 시험

까지 동원해 국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가동 중인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 기능을 갖춘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사업장으로 보내 대리출석 및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꼼수를 썼다.

A씨 등은 또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사 자격증까지도 불법으로 대여받았다. 시설에는 4명 이상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도 경리직원 1명만 상시 고용하고 나머지 직원인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총동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훈련과 관련 없는 일반서적을 받은 훈련생(직장인)들에 대한 수사 등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직업교육기관과 교육계약을 맺은 사업주간 부당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담양 펜션 화재 업주 18억원 배상해라”

2014년 ‘17명 사상’ 90% 과실 책임...10%는 전남도 책임

2014년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업주가 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흥 부장판사)는 전남도가 펜션 업주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재 사망자 5명과 중상자 1명은 업주인 이들 부부와 관리기관인 전남도를 상대로 안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들 부부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20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barbecue장은 출입문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하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전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다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업주인 이들 부부가 barbecue장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이들 부부 손해배상 책임(과실) 비율을 90%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관리 기관인 전남도가 책임 지도록 했다.

한편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 모펜션 barbecue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소유주인 전 기초의원 최씨와 아내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최씨는 징역 4년, 아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대법원 “2심 재판 다시 하라”

일반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16년 8월 초 헤어진 여자친

구 김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집에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배씨를 빨리 보내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어깨를 토닥이는 등 달래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배씨는 때마침 김씨를 찾아온 김씨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 시비가 붙었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

배씨가 ‘합의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새 남자친구를 고소하자, 김씨가 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 개입설 반박’ 지용씨 카톡 받고 지만원이 보낸 협박으로 착각



○... 극우인사 지만원(75)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5·18 시민군 출신인 지용(76)씨가 지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만원이 보낸 협박 메시지로 착각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

○...임중수 5·18기념문화센터장은 27일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26일 오후 8시36분께 지용씨가 지만원씨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비난 메시지를 받은 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극우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용씨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등 지씨를 강력히 비난.

○...하지만, 임 소장이 지용씨로부터

받은 보낸 메시지는 지난 26일 5·18 유공자들이 함께 모인 식사자리에서 이종춘 목포대학교 교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지용씨의 동의를 받아 지만원의 홈페이지 글을 복사해 보낸 것으로, 지용씨는 이를 지만원이 전송한 것으로 착각해 임 센터장에게 불안감을 호소했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

○...지만원씨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내)홈페이지에 지용씨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겠느냐”고 부인했으며, 광주일보의 취재로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한 임 센터장도 “지만원이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다”며 수정된 메시지를 재전송.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청소년들이 만든 5·18 레드페스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청소년 5·18 축제인 '5·18 레드페스타'가 지난 26일 금남로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 5월→7월로 변경

법원, 기일 연기 신청 수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

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난 2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

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그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재판이 연기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번 사건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제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에서도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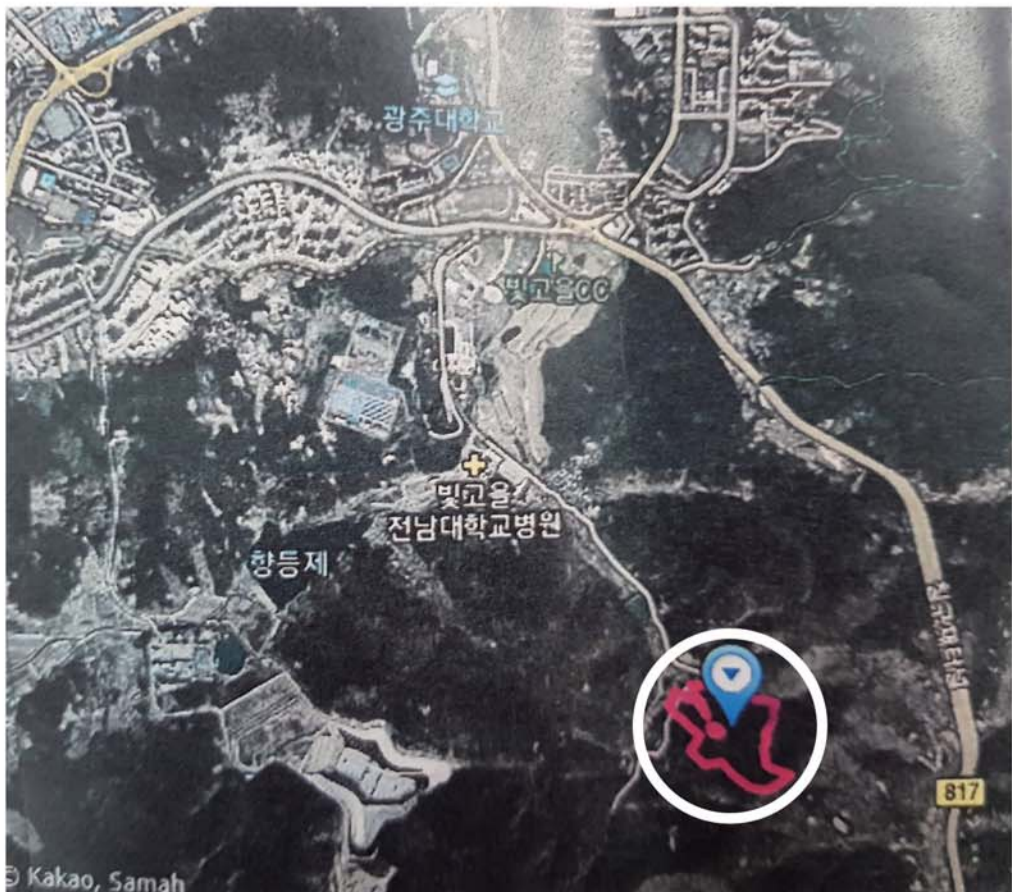
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시 강제 구인 여부도 관심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최고 투자물건 입니다 ※



임야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